

유일호 경제부총리 “국책은행 자본확충 필요”

수출입은행 기업지원여파로 BIS 비율 9%대로 내려앉아 자본확충 시급... 유동성 지원보다 구조조정 먼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부총리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지원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보다 구조조정의 개념과 방향성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유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획재정부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 관련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다 틀어쥐고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범정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자본확충이 시급한 곳은 수출입은행이다. 수은은 지난해 성동조선해양에 단독으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하는 자기자본(BIS)비율이 9%대로 떨어졌다.

수은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조원 규모의 한국투자주택공사(IH) 주식을 현물출자 하면서 BIS비율을 10%으로 끌어 올렸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과 외화 여신 총량이 급증하면서 BIS비율이 현재 9.8%까지 떨어진 상태다.

현재 수은은 산업은행이 가진 5000억원 규모의 IH지분을 추가 출자 받는 방향의 증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세금의 문제로 출자 작업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산은의 IH지분 13.9%에 대한 장부가는 4950원이지만 수은이 정부로부터 받은 IH지분의 가격은 9205원에 달했다.

산은이 수은에 이를 출자할 경우 차익이 발생하면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차익이 발생할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된 법인세를 부과 받게 되며 산은은 500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때 나온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 구상에선 산은의 금융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식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던 만큼 변형된 형태로 산은의 자본을 확충해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의 패배로 당초 구상대로 이뤄지는 건 어렵겠지만 산은이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축을 맡고 있는 만큼 자금 어려움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구조조정의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자본이 확충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금융권에 유동성이 부족해 살리지 못한 회사는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수출입은행은 다른 채권단의 반대에도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희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우조선해양에 조 단위를 지원한 산업은행은 1000억원을 요구한 건설사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지원을 거절하기도 했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유동성이 부족해 회사를 살리

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대주주들이 피해를 우려하고 어떻게든 자기 몫을 챙기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이 생처럼 솟는다면 모든 회사에 유동성을 끝없이 공급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돈이 없어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닌 만큼 당국에서는 큰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는 “대주주들의 피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라며 “회사를 일으킨 경험에 큰 문제도 작다고 느끼는 안일한 생각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에서 제시할 방향에 대해서는 “살려야 할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 또 합병해야 좋은 회사 등으로 나눠주는 것”이라

며 “산업별 지원 비중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조조정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의 개념은 잘 안되는 사업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사에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어느 순간부터 구조조정은 은행의 지원이라는 공식이 설립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배드 컴퍼니의 문제가 있는 사업부를 정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채비율이 400% 밑으로 낮출 경우 지원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목표 없이 무조건 유동성을 제공해 회사를 살리려는 방식으로는 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진수 기자



참가자들로 북적이는 티맥스OS 발표회장

(Tmax)OS 발표회가 참가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티맥스

고가 오피스텔 거주자도 집 담보 연금 가능

정부가 주택연금 3종 세트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안에 나선다.

기존 9억원 이하 1채라는 주택연금 가입 제한을 없애고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담보 잡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9억원 넘는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매달 받는 연금을 수령하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현행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 1채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도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기준에 뒀던 9억원 이하 1주택 규정은 합산 주택 가격이나 보유 주택의 수량과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면 완화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게도 우대형 주택연금을 제외한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최근 오피스텔 거주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월지급금은 일반 주택과 별도로 산정할 방침이다.

9억원 넘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만, 주거용 이외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가입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금융공사법과 시행령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을 따로 규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인진수 기자

온라인보험시장 최근 3년새 7배나 증가

온라인보험시장이 최근 3년새 7배나 증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보험이 보험업계에서 새로운 판매채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보업계의 온라인보험 판매금액은 75억5500만원으로 2012년(56억7600만원)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보험 판매비중은 0.008%에서 0.06%로 3년새 7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으로 보험정보 전달과 보험가입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판매채널은 간단한 보장성 보험의 중요한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다. 생보업계에서 대표적인 온라인상품은 정기보험과 암보험이다. 정기보험은 일정기간(보험기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암보험은 암이 발생할 때 진단비를 중심으로 입원비, 수술비, 방사선치료비 등의 치료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현재 온라인채널에서 판매되는 정기보험과 암보험은 다른 채널보다 보험료가 최대 53%까지 저렴하다. 여러 명이 온라인보험에 가입할 때 3% 수준의 추가적인 보험료할인이 적용된다. 더욱이 온라인보험은 회사별 동일상품 간 비교가 쉽고 소비자친린 발생여지가 적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손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인진수 기자

제 때 못받은 퇴직 연금,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금융권 표준약관 제·개정 진행... 6월 1일부터 시행계획

퇴직연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으면 추후 이자까지 더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금융회사의 자동차 대출 계약을 맺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이나 환불 요건 등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된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을 지급이 미뤄지면 이자를 덧붙이고, 자동차 대출 계약과 신용카드에 관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권 표준 약관을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오는 6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연 이자 지급 의무와 계약을 이질할 때의 처리 절차와 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별 약관을 마련 중이다. 약관이 개선되면 퇴직 일시금을 제 때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 근거해 이자를 덧붙여 미지급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에는 또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이전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입 회사를 옮기는 과정이 늦어지는 동안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꾸린 협의체에서는 울 상반기 적용을 목표로 자동차 대출과 선불(기프트)카드 관련 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있다.

개별 회사마다 서로 다른 약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있고, 정보에 접근하기가 불편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될 약관에는 자동차 대출 관

련 금액·이자·상환 방법 등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을 맺을 때 해당권 해지를 대행할 권리를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이용 과정에서 잔액을 확인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사용처와 온라인 사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